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11(금) ~ 2025.7.17(목)

제공일시 2025 7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11(금) ~ 2025.7.17(목)

제공일시 2025 7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트럼프 30% 관세에 보복 준비... 미국산 항공기·자동차 포함

- 유럽연합(EU)이 30% 관세 부과를 위협한 미국에 대해 720억유로(약 116조원) 상당의 2차 보복 조치를 준비함
- 14일(현지시간) 폴리τικο 유럽판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0페이지 분량의 보복 목록을 작성함. 보복 대상 대부분은 공업 제품으로 657억유로(약 106조1천억원), 농산물은 64억유로(약 10조3천억원)에 달함. 단일 품목 중에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이 110억 유로(17조7천억원)로 가장 큰 규모임
- EU가 이 같은 보복안을 실행할 경우, 보잉 등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 기계류와 자동차,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의료 장비, 전기 장비 등도 보복 대상으로 선정됨

[\(연합뉴스 2025.7.15\)](#)

2. 美 대형 원전 사업 발주 예고... 원전 르네상스 가속화

- 미국에서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발주가 예고됨.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옴
- 13일 코트라 미국 워싱턴DC무역관에 따르면, 뉴욕주는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캐시 호걸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공영전력청에 뉴욕주 북부에 최소 1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을 지시했다”고 밝힘
- 업계에서는 이번 뉴욕의 대형 원전 사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원자력 르네상스’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가능할 잣대로 보고 있음

[\(더구루 2025.7.13\)](#)

3. 영국, 고탄소산업 전환금융 시범사업 착수... “녹색금융으로 370조원 성장 이끈다”

- 영국이 고탄소 배출 기업의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섬
-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각)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런던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연례 맨션하우스(Mansion House) 연설에서, 고탄소 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영국 정부는 산업계 규제 부담 완화와 시장 성장 간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전환금융 시범사업(Transition Finance Pilot)’을 통해, 고탄소 배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제도적·금융적 장벽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7.14\)](#)

국내 정책

1. 李대통령 공약 'RE100 산단' 본격 추진... 글로벌 탄소규제 시장 뚫는다

-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함.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함
-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에너지경제 2025.7.12\)](#)

2. 정부, 경제안보품목 보조금 지원 착수... 7~8월 지급 예정

- 정부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등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에 본격 착수함
- 중국이 저가 공세로 사실상 음극재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탈중국 흑연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이르면 7~8월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짐
-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흑연과 무수불산(반도체·이차전지 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국내 유일의 음극재 생산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지원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관련 보조 사업을 신설함

[\(이데일리 2025.7.13\)](#)

3. "생물다양성도 산업과 연계"... 환경부, 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건립 추진

- 환경부가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 생물다양성 분야를 제약, 화장품, 식품, 농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하려는 구상임
- 환경부는 해당 센터를 통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환경부는 그간 다량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확보했지만, 이를 산업과 연계하는 시도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융복합센터를 통해 생물 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전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환경부는 센터 건축 계획과 사업 추진 계획, 고부가 가치화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사전 타당성 검토에도 나설 예정임

[\(조선일보 2025.7.11\)](#)

글로벌 기업

1. 테슬라, 세계 최대 '태양광 충전소' 가동... 전력망 없이 100% 자급 가능

-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완전 태양광 충전소를 전격 오픈함. 이 충전소는 미국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도 자급이 가능한 최초의 '오프그리드(Off-grid)' 방식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트 힐스(Lost Hills)에 완전 태양광 기반 전력 충전소 '프로젝트 오아시스(Project Oasis)'를 공식 개장함. 현재 총 168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현재 84기가 운영 중임

[\(더구루 2025.7.13\)](#)

2. 닛산, 미국 전기차 생산 1년 연기... 트럼프 정책 변화 여파

- 일본 닛산이 미국 미시시피주 캔턴 공장의 전기차 생산 일정을 1년가량 늦추기로 함. 미국 내 전기차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닛산 미국법인은 최적의 제품을 최적의 가치로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현지 생산 개시 시점은 기존 2027년에서 2028년 1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IT조선 2025.7.14\)](#)

3. 中 해상풍력 기업, 국내시장 공습 '신호탄'

-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CEEC)가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국가 안보 위협과 국부 유출 논란에 더해 중국 업계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마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14일 업계에 따르면, CEEC는 자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 전라남도의 365MW급 해상풍력 EPC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며, "계약 규모는 105억 위안(약 2조원)"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2025.7.14\)](#)

4. 호라이즌, 1500km 주행 수소트럭 상용화... 중국서 100대 공급 성사

- 호라이즌퓨얼셀그룹(Horizon Fuel Cell Group)이 1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대형 수소트럭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개하며 무공해 상용차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전기차 전문 매체 EV리포트와 수소 전문 매체 퓨얼셀웍스는 14일(현지시각) 호라이즌이 중국 상하이우류자동차기술(Shanghai Wuliu Automotive Technology)과 협력해, Z 트럭 오토모티브(Z Truck Automotive Technology)의 42톤급 수소트럭에 탑재될 연료전지 시스템 100세트를 공급한다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5.7.15\)](#)

국내 기업

1. '유럽 독점 뚫은' 포스코, 사우디 아람코에 HIC 강제 첫 납품

- 기간 유럽 철강사가 독점 공급해 온 대형 에너지 인프라 증설사업에 포스코의 철강재가 공급되는 쾌거가 이뤄짐
- 포스코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 증설 사업'에 HIC 인증 에너지 강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힘
- 파드힐리 증설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기존 플랜트의 가스 처리량을 1.6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형 에너지 인프라 증설사업임
- 포스코가 이번에 납품한 HIC 강재는 수소 유발 균열(Hydrogen Induced Cracking)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강철로,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용 강관이나 압력 용기 소재 등으로 활용됨

[\(매일일보 2025.7.13\)](#)

2. LG엔솔 美 법인, 현지 ESS 프로젝트 수주... '600MW' 규모 배터리 공급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ESS(에너지저장장치)향 신규 수주를 확보함
-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시스템통합(SI)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버텍스가 D.E. 쇼 리뉴어블 인베스트먼트(DESRI)와 엘파소 일렉트릭(EPE)이 공동 추진하는 '산타테레사 태양광·저장 프로젝트'에 600MW(메가와트) 규모 배터리 ESS 시스템을 공급함

[\(메트로신문 2025.7.16\)](#)

3. 효성중공업, 베트남 '200조' 전력기기 시장 정조준

- 효성중공업이 오는 2030년까지 약 20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 베트남 전력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섬. 베트남전력공사(EVN)와 스타콤(STATCOM·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장치), 변압기 등 포괄적인 사업 협력을 협의함
- 양사는 효성의 주력 제품을 활용해 '전력 수급 안정화'라는 공통의 목표로 함께 나가자고 다짐함

[\(더구루 2025.7.15\)](#)

4. GS칼텍스, 바이오 연료 '벨류체인' 완성... 인니공장 본격 가동

- GS칼텍스가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 연료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본격 가동함.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동 투자해 칼리만탄티무르주 발릭파판 산업단지에 짓는 ARC 법인이 올해 3분기 가동 목표로 막바지 건설에 한창임
- ARC 법인은 생산 능력 연 50만톤 규모로 바이오 원료 및 식용 유지를 생산할 수 있음

[\(뉴시스 2025.7.11\)](#)

英, CCUS에 93조 투자 예고... 의회 “산업 직접감축 병행해야”

- 영국 정부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확산을 위해 2050년까지 500억파운드(약 93조3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기대만큼의 감축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1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간 7500만톤의 탄소를 포집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비해, 현재 정책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은 8%에 그친다고 지적했음
- 영국은 산업계 배출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CCS 프로젝트에 향후 25년간 최대 217억파운드(약 40조5000억원)를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보수당 정부가 기존에 밝힌 200억파운드(약 37조원)보다 확대된 규모임. 여기에 세제 혜택, 혁신기금,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050년까지 500억파운드(약 93조3000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됨
- 테사이드와 머지사이드 등 주요 산업지역에 조성될 CCUS 클러스터는 연간 8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계획임. 북해전환청은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될 경우, 영국 내 CCUS 포집량이 2050년 기준 최대 1억8000만톤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하지만 IEEFA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려면 2050년까지 누적 4080억파운드(약 76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보조금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음. IEEFA는 CCUS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며, 과거 사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예산을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수요 관리처럼 이미 입증된 저비용 감축 수단에 비해 CCUS는 고비용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영국 정부 주도의 CCUS 프로젝트는 과거 세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음. 대표 사례로는 스코틀랜드 피터헤드 항만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북해 밀러 유전에 저장하는 프로젝트가 있음. 이 계획은 자금 확보 실패로 좌초됐으며, 이후 두 차례의 사업자 공모도 예산 합의 실패로 무산됐음
- 최근에도 사업 추진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PAC는 현재까지 정부가 체결한 대부분의 대형 CCUS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됐으며, 기술 보급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음
- 국제적인 제도 단절 문제도 제기됨.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Eni)가 이달 초 발표한 ‘유럽 에너지 전환 기술’ 보고서는 영국이 CCUS를 핵심 저감 수단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제도 연계가 끊기며, 유럽 산업계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EU ETS 등과의 제도 연계를 통해 CCS 산업계의 이중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음
- PAC는 향후 발표될 ‘탄소예산 이행계획’에 △CCUS 대비 산업 직접 감축 비교 △소규모 지역기반 프로젝트 기준 △2030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 제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음

- IEEFA 에너지금융 분석가 앤드루 리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CCUS는 필요하지만, 입증된 대안 수단보다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팩트온 2025.7.17\)](#)